

전주매일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음 10월 20일) 제21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바른미래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

전북도-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

송 지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 예산 반영 건의 탄소진흥원 설립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등 법안 통과 주문

전북도는 국회 예결위예산안조정소 위원회 본격 가동으로 국가예산 확보 의 중요한 시점에서 26일 전북도청에 서 바른미래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현 안 해결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이준석ㆍ권은희 최고위원,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 공조활동 배경에 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4대법안

정운천 도당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헌

경 사무부총장, 박매호 6차산업특위

등 도정 현안을 조속히 풀기 위해 정 책적으로 지원하고 공조하는 것으로 품이되다

따라서,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 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서명해다

2023 새만금 세계쨈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SOC 조기 구축사업,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확보, ▲인계~쌍치 국도 21호선 선형개량사업 등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생태 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전북경 제 체질 개선사업이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 중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생산된 종 자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 축,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스마 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조성 및 운영 비 전액 국비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발굴, 보존 정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 는 국가처원의 국학기관인 전라유학진 흥원 설립, 전라권 3개 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립 중인 스마트용복합멀티 플렉스 조성 등의 반영도 피력했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있도록 건의했다.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 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 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혁신도시가 농생명식품산업과 연기 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성장하 고, 기존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농생 명과 탄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으로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진성기자

"사립유치원은 '학교' 영리기관 될 수 없다"

김승환 교육감, "법률 마련돼야" 강조

"사립유치원 은 법률상'학 교'다"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 육감은 사립유 치원이 '학교'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영리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 다

'사립유치원'이 법률상 학교라는 것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 정지원 의무와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 의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두 개의 법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나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 예산이 설립자의 재산 증식으로 악용 될 여지가 커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중・고등학교 선례에서 보면, 사립중・고교는 인건비와 학교운영 비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 서도 (교육청이) 교원 공개채용과 학 교 운영에 대한 감독, 비리교원에 징 계권 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도내 서립유치원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 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다만 서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접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 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으로, 또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 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예고했 으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회계직원이 없으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회계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보조금(누리 과정, 재정결함보조금 정도)에 한해 별도의 시스템은 운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은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교무행정을 분리해야 하며, 행정 전문인력을 의무채용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한다. /장은성 기자

쇠창살 없애고 규모를 넓히고

전주동물원 '곰사' 재개방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형 우리에서 생활해온 전북 전주동물원 곰들이 쾌적한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26일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곰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위원, 전주동물원 생태해설사, 관람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곰사 재개방 기념 행사를 가졌다. 〈관련사진 4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곱사 신축은 전주동

물원을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원으로 만드는 생 태동물원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국비 7억5000 만원 등 총 21억원이 투입돼 지어졌다.

시는 기존 261㎡의 좁은 곰사를 철거하고 약 2326㎡의 규모로 9배가량 넓혔다.

또 국내 동물원에서는 드물게 총 11개의 방으로 구성된 내실과 3개의 방사장에 동물을 교차 방사할 수 있는 순환 방사 시스템이 구축됐고, 2 개의 내부 방사장도 조성됐다. 특히 콘크리트와 철창을 없애는 대신 동물이 좋아하는 물웅덩이와 놀이시설, 은폐공간, 수목 등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4마리의 반달가슴곰 가족 과 6마리의 애조불곰 등 총 10마리의 곰이 생활하게 된다.

이날 재개장 기념행사에서 관람객들은 반이 와 아웅, 다웅 등 전주동물원에서 서식 중인 반달가습곰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이하며 새로운 집이 생긴 것을 축하했다. /송효철 기자



350 27 RE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才社社 제주시대를 열겠습니다